

일련번호	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징계 등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미준수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연천군 소속 공무원의 봉급·호봉 및 승급 등 보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6항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대통령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강등·정직의 경우에는 18개월, 소극행정·음주운전·성폭력 등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가과는 음주운전의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총 27개월(징계처분 기간 3개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 음주운전에 따른 6개월 가산) 동안에는 해당 공무원을 승급시킬 수 없고, 승급제한기간 중에 “직위해제” 처분이 있으면 기존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직위해제기간을 기산하여 승급제한기간을 다시 계산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연천군 소속 공무원 ◇◇◇◇☆급 ○○○에 대해서 2020. 3. 26. 음주운전의 사유로 “강등” 처분을 하였고 2020. 6. 26. 재차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으며 2021. 5. 20. 직위해제 복직을 명하였는데,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기간은 2020. 3. 26.부터 2023. 5. 19.까지이다.

그런데 가과는 [표 1]과 같이 승급제한기간에 직위해제 복직에 따른 호봉재확정, 정기승급 등 4차례에 걸쳐 승급 발령을 하였고, 승급제한기간 시작일(2020. 3. 26.) 기준 당초 호봉은 ◇◇◇◇★급 15호봉으로 승급제한기간 종료일(2023. 5. 19.)까지 승급이 제한되어야 하나, 2023. 4. 1. 당초 호봉보다 2호봉을 승급한 ◇◇◇◇★급 17호봉으로 확정하는 등 보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1] ◇◇◇◇☆급 ○○○ 호봉 현황 : “생략”

그 결과 연천군은 징계 등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관한 업무 처리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호봉승급에 대한 일반공무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기간 중 위 사실을 인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호봉을 정정하였고 호봉 정정에 따라 과지급된 보수액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간 해당 공무원의 급여에서 환수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업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공무원 보수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 보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급 ○○○에 과지급 된 보수액을 계산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통보

제 목 ○○○○○○ □□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연천군 다과(이하 “다과” 라 한다)가 [표 1]과 같이 운영하는 ○○○○○○의 □□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주당 35시간) 3명을 채용·관리하고 있다.

[표 1] ○○○○○○ 운영 현황 : “생략”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22조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분야로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업무 분야,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 분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정원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므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 분야인지, 적정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하고, 임용 이후에는 당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약정한 근무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업무에 연천군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 □□ 업무가 ○○○○○○ 개원(20■■■. ■■■. ■■■.) 이래 △△△ 관리 등의 사유로 주·야간 근무 및 근무자 간 교대 근무가 예정되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주당 35시간) 3명의 인력으로는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감사일 현재(2023. 11. 20.)까지 시간선택제임기제(주당 35시간) 3명만을 채용하였고 이들 3명을 모두 현업 공무원(초과근무 상한시간 적용 제외)으로 지정하여 업무 인력의 부족을 기존 인력의 초과근무로 대체하는 등 시간선택제임기제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하였다.

그리고 가과는 [표 2]와 같이 ○○○○○○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의 2022년 ~ 2023년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83 ~ 107시간으로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해당 업무에 연천군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배치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사후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2] ○○○○○○ □□ 복무 현황 : “생략”

그 결과 연천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는 인력 운용을 하게 되었고, 탄력적 인사운영을 위해 도입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였고, 1인당 연간 사무량이 250일이 초과하지 않도록 일반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력 재배치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업무연찬 및 인계·인수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 □□ 업무의 실제 사무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치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나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나과(이하 “나과”라 한다)는 연천군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서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혐의사실이 인정되는지 등을 사전에 판단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제3호인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에 해당하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곧바로 [별표 1]에서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과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천군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통보를 받으면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의 경우 반드시 관할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과는 [표 1]과 같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공소제기),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송치(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로 통보받은 범죄사건 6건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반드시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연천군수의 결재를 득하여 사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훈계 처분하는 등 내부종결 처리하였다.

[표 1]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부적정 처리내역 : “생략”

그 결과 공무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관할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징계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나과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사안에 따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의 결정이 해당 공무원에게 가혹한 처분으로 여겨질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훈계 처분을 하는 등 처분 양정을 달리 해왔기에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재량이 없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행정 처리가 부적절하였음을 확실하게 인지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연천군수의 결재를 득한 ‘징계의결 요구 방침’ (나과-○○○○○○, 2023. 11. 22.)을 통해 앞으로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징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위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계 ·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재해영향평가 사업장 관리 · 감독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의 협의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미이행에 따른 조치 명령 후 업무처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가 끝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표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표 1] 조치 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만 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9조 제1항 제4호	200	300	500

자료: 자연재해대책법 과태료 부과기준 재구성

따라서 가과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명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22. 12. 5.(월) 연천군 다과로부터 (주)○○○○○○○○(연천군 ◇◇면 ◆◆리 ●●●-●●)가 건축공사 허가 외 불법행위가 있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수신하여 2022. 12. 7.(수) 담당자 A가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바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인 영구저류시설 및 조정녹지 지역을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표 2]와 같이 확인하였다.

[표 2] 현장 확인 사진 : “생략”

그래서 가과는 2023. 1. 5.(목) 문서로(가과-332호) (주)○○○○○○○○에게 2023. 1. 20.(금)까지 의견제출서를 요청하고 2023. 1. 31(화)까지 조치 명령 이행 및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공문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가과는 (주)○○○○○○○○가 조치 명령을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준수를 소홀히 하여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재해영향평가등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등 업무 처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관리책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하지 않거나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공사중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표 3]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 등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만 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9조 제1항 제1호	200	300	500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9조 제1항 제3호	200	300	500

자료: 자연재해대책법 과태료 부과기준 재구성

따라서 안전총괄과는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지정, 공사의 착공·준공, 공사 중지 통보를 하지 않은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4]와 같이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 및 착공·준공, 중지 통보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고, 사업장에 대한 착공 등의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4] 연천군 재해영향성평가 착공된 사업장 현황 : “생략”

그 결과, 가과는 법의 형평성을 훼손하여 연천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업무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부서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재해영향평가 각 사업장에 대한 착공·준공 등 진행 상황에 대한 연락 체계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지만 지속적인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 등이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과 등 재해영향평가 승인부서에서는 사업자에게 ‘건축허가 통지’ 공문을 발송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와 재해영향평가 담당자를 명시하였고 가과 등 관련 부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기에 위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대상이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조치 및 관리 책임자 미지정 통보 대상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앞으로 같은 사항으로 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고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에서 협의부서로 통보 사항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과의 연락 체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요구

제 목 불법 산지전용 행위 관련 업무처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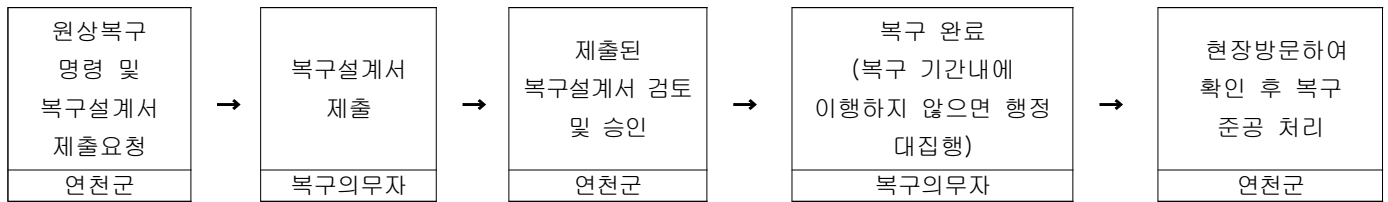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 내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형질 변경의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법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복구의 대집행 실시 등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은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를 명하고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0조, 제42조에 따라 훼손된 산지에 [표 1]과 같이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산지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절차



자료: 「산지관리법」 및 연천군 복구명령 공문 재구성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 복구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법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과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전용 하거나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 복구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절차 및 사법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사법조치 미실시, 원상복구 명령 없는 복구준공 및 설계승인을 하지 않고 복구준공 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산지 불법행위 업무처리 소홀 대상 : “생략”

그 결과, 가과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단속하는 부서로서 불법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소홀히 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연천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부서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불법산지전용 확인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법 건에 대해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앞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산지전용 행위 단속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불법 산지전용을 한 대상은 현장 확인 후 훼손된 산지가
원상복구가 되도록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다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요구

제 목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 과태료 부과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다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 다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이라 한다)에 따라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일반음식점(영업장 바닥면적 100㎡ 이상)등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미가입, 가입의무 위반기간 대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재난안전법 제76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5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표 1]과 같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비 고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 원을 더한 금액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 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 만원을 넘지 못한다.	

자료: 재난안전법 과태료 부과기준 재구성

따라서 연천군 가과 등 2개 부서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해 보험 가입 안내 및 미가입 대상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연천군 가과 등 2개 부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 24개소에 대한 과태료 4,570천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 현황 : “생략”

그 결과 연천군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 초과 대상이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연천군 가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과에서는 앞으로 시스템 사용법을 필히 숙지하여 과태료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 요구

제 목 민방위 업무 계획 연천군 민방위 협의회 미승인 등 업무처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 이라 한다)는 「민방위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 「연천군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민방위 관련 계획 수립 및 시설·장비·물자,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 등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민방위 계획 연천군 민방위 협의회 미승인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방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천군수는 통보받은 경기도 민방위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대한 연천군 계획을 작성하여 민방위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과는 매년 연천군 민방위 계획 수립 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협의회에 심의·확정 후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2020~2023년 연천군 민방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천군 민방

위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가과는 「민방위기본법」을 준수하지 않고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3. 민방공 경보 단말 관리 관련 통신보안교육 등 미 실시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연천군은 「연천군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민방위 업무 담당과장은 시설관리요원에게 매월 1회 이상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자체경보시설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보안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점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연천군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관리요원에게 매월 1회 이상 통신보안교육 및 자체경보시설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1회 이상 통신보안교육 및 자체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가과는 「연천군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규정」 준수를 소홀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 훼손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민방위 장비 등 관리 업무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가과는 「민방위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에 따라 민방위 사태와 화생방 상황에서 주민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방공, 응급적인 방재, 긴급구호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를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2023년 변경된 「행정안전부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에 따르면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는 민방위 계획에 따라 시·군·구 주관으로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보관창고에 비치하고 점검 결과에 스캔본을 반영하여 공문화 하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보관창고별로 유사시 신속한 불출 도모 및 부족 수량 파악을 도모하기 위해 장비명, 소요량, 확보 현황 등을 기록한 개정된 현황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2023년 「행정안전부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에 대한 분기별 점검 실시와 장비에 대한 현황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감사일 현재까지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에 대한 점검 및 보관창고에 변경된 현황판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민방위 장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비상 상황 시 민방위 장비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연천군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 준수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민방위 관련 계획 수립 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연천군 민방위 협의회 심의·확정 후 경기도 제출 및 시행하여 주시고, 「연천군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통신보안교육 및 자체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에 따라 민방위 장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 및 장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8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145,514,86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납세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 적격요건의 충족 여부, 감면 목적에 직접 사용 여부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하고, 감면요건을 상실한 납세자의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제8조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부칙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농업법인 감면 실무·운영 적용 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608, 2020. 11. 3.)에 따르면 세목별 감면적용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세목별 감면적용 요약 : “생략”

따라서 가과는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농업법인이 감면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감면 유예기간 내 해당 부동산을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매각·증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감면 요건을 위반하였다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2]와 같이 영농조합법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 이전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등 농업법인의 감면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 87,292,25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표 2]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대상 내역 : “생략”

3.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감면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감면 유예기간 내 해당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매각·증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감면요건을 위반하였다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3]과 같이 주식회사 □□□□□□ 등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창업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58,222,61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추징대상 내역 : “생략”

그 결과,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감면 요건을 상실하였는데도 부당한 감면 혜택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한 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세무행정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연천군은 감사 지적사항을 모두 인정하면서, 확인한 추징 대상에 대하여 추징하고 개정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여 감면의 적격요건을 적용하는 등 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 등 ○○인에게 취득세 등 145,514,86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시기 바라며, 앞
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등의 감면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9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293,95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다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다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 및 다과(이하 각각 “가과”, “다과”라 한다)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과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 국가와 경기도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아 「국유재산법」 등 관계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유재산법」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르면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하며,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

로 구분하며, 제28조 제4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년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국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주위 환경, 이용 현황, 그 밖에 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 제1458호, 이하 “재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훈령 제343호, 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재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도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재산관리규정 제6조 제1항·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재산관리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와 같이 위임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의 각 목에 따른 재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하고,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하며, 재산권·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처분·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되,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및 다과는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 등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매년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재산은 1년에 1회 이상 국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주위 환경, 이용 현황, 그 밖에 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

여 점검한 후 최종적으로 국유재산 대장을 정비하는 등 일련의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19년~2020년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은 수립(2019. 5. 1., 2020. 10. 8.)하였으나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다과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각각 연도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된 경우만 현장 출장하여 이용 현황을 확인한 후 원상회복 명령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인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존용 재산인 경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일부를 사업부지 내 진·출입로, 농지 등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실경작자가 경작용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로 사용허가한 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2022. 8. 20.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 연천군 ○○면 소재에 부동산 개발 사업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면서 연천군 ○○면 도로 중 일부 면적을 사업부지 내 도로개설 및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도, 2022. 8. 24. 사용허가 신청한 면적을 경작용으로 판단하고 사용료의 요율을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이 아닌 1천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잘못 부과하였다.

4.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2조 및 제74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리·처분 등 업무를 위임받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2022. 7. 1. 주식회사 □□□□□□가 연천군 □□면 도로 중 일부

면적을 무단점유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 까지 이에 대한 변상금 233,600원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국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세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주었고,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였다.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 및 다과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매년 국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과소 부과한 사용료 등을 추징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국유재산법」 제6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국유재산 대장정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주식회사 □□□□□□ 등 ○인에게 사용료 및 변상금 합계 293,950원을 추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1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69,79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계 ·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건강검진 사유의 공가 부정 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등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 휴양 · 안전 · 후생 등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건강검진 사유의 공가 부정 사용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연천군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공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공가 일시에 검진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면 근무지로 복귀하거나 근무상황부에 공가를 취소하고 연가로 변경하여야 했다.

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8호)은 2018. 1. 1. 자로 개정 시행되어 2차 검진(재검진)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건강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1차 건강검진 후 재검진 또는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연천군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공가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표 1]과 같이 ○급 A은 공가일에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았고, ○급 B는 공가일과 실제 수검일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급 C 등 2명은 1차 건강검진 후 재검진 또는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표 1]과 같이 재검사 등 확진검사 목적으로 공가를 사용하였다.

[표 1] 건강검진 수검일과 공가 사용일 불일치 및 부정 사용 명세 : “생략”

그 결과 관련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복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부적정하게 사용된 공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에 따르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표 2]와 같이 ○급 A 등 3명은 허가받은 공가의 목적과 다른 사유로 공가를 사용했는데도 연가로 변경하는 결재를 받지 않아 총 169,790원의 연가보상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

[표 2]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공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적정 지급 명세 : “생략”

그 결과 다른 직원들과의 연가보상비 지급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며,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허가받은 공가의 목적과 다른 사유로 공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자들은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근무상황부를 정정하지 못하였다며 과다 수령한 연가보상비를 즉시 반납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다른 목적으로 공가를 사용하고도 연가로 변경하는 결재를 받지 아니하여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천군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지속해서 복무 관리와 교육을 시행하고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부정 사용하는 공가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공가를 사용한 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총 169,79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2020년~202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검완료건 중 허가받은 공가일과 다른 일자에 수검한 건들에 대해 자체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거나 증빙자

료 첨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437,53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근무명령으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당직근무자 등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보수지침” 이라 한다) 제5장에 따르면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시험감독 근무자, 공직

선거 투·개표종사 등),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제1호~제3호 비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다.

한편, 보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¹⁾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 지침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 청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정지하여야 하며, 부정 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최대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당직근무자, 공직선거 투·개표종사자는 별도의 수당을 수령하고, 을지연습 1일 차 비상소집 조기출근 시간은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초과근무명령 사전 및 사후 신청 내용, 출·퇴근 인식 내용 및 초과근무 정산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지 않았어야 하며, 본인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당직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보수지침 제5장에 따르면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표 1]과 같이 ○급 A 등 3명은 당직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해서 수령하였다.

1) 2021. 12. 9. 이전 2배를 가산하여 추가 징수

[표 1] 당직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명세 : “생략”

2) 선거사무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보수지침 제5장에 따라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인 공직선거 투·개표 종사자 등 선거사무 종사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표 2]와 같이 ○급 B 등 2명은 2020. 4. 10. ~ 4. 11.에 진행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의 투·개표사무종사자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해서 수령하였다.

[표 2] 선거사무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명세 : “생략”

3)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응소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보수지침 제5장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제1호~제3호 비상근무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자로 되어 있고,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근무자(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은 제외)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는 2022년, 2023년에 복무 관련 사항 안내 공문²⁾을 통해 비상소집으로 인한 조기출근은 초과근무 불인정함을 31개 시·군에 안내하였고, 연천군 가과 또한 비상소집으로 인한 조기출근은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응소 후 인사량 시스템 출근확인 등록 금지라고 안내³⁾하였는데도 ○급 C 등 12명은 [표 3]과 같이 을지연습 비상소집일(2022. 8. 22., 2023. 8. 21.)에 초과근무 사전명령 신청을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경기도 다과-00000호(2022. 0. 00.) “2022년 을지연습 기간 중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발령 및 결과보고 방법 알림”, 경기도 다과-00000호(2023. 0. 00.) “을지훈련 기간 유연근무해제 등 복무관리 알림”

3) 새올행정시스템 게시물번호(00000, 2022. 0. 00.) “을지연습(비상소집) 훈련에 따른 안내 사항”, 연천군 가과-00000(2023. 0. 00.) “을지훈련 기간 유연근무해제 등 복무관리 알림”

[표 3] 을지연습 비상소집 응소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명세 :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당 관련자들 또한 감사 결과를 인정하면서 부정 수령한 수당을 즉시 반납하고,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천군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해 지속해서 복무 관리와 교육을 시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에 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 당직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수령한 [별표 1]의 당직근무자 A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액 43,800원과 부정수령액의 2배인 가산징수액 87,600원 등 총 131,400원을 회수하시고, D 등 2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액 27,940원과 부정수령액의 5배인 가산징수액 139,700원 등 총 167,64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투·개표사무종사자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수령한 [별표 2]의 선거사무종사자 2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액 113,110원과 부정수령액의 2배인 가산징수액 226,220원 등 총 339,33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을지연습 비상소집 응소로 인한 조기출근 시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별표 3]의 12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액 299,860원과 부정수령액의 5배인
가산징수액 1,499,300원 등 총 1,799,16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1] 당직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액 및 가산징수액 : “생략”

[별표 2] 선거사무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액 및 가산징수액 : “생략”

[별표 3] 을지연습 비상소집 응소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액 및 가산징수액 :
“생략”

일련번호	1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4,322,46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정직·강등·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2. 정직·강등·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르면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정직·강등·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받은 자들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당해연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이후에 남은 연가 일수에 대해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했다. 또한 연가보상비를 받은 당사자들은 복무 관련 규정 및 지급된 급여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과다하게 지급 되었으면 반납 등 시정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빼면 연가 가능일수가 없는 ○급 A 등 3명에게 [표 1]과 같이 2020년에는 465,050원, 2021년에는 133,130원의 연가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1] 정직 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적정 지급 명세 : “생략”

한편 ○급 A 등 2명은 해당연도 연가 가능일수에서 직위해제 일수, 정직 일수를 각각 공제하면 잔여 연가일수가 없는데도 [표 2]와 같이 연가를 초과해 사용하였다. 또한 2시간씩 연가를 저축하였는데 이 중 B는 저축한 2시간을 2023년 1월 27일 1시간 30분, 2월 2일 30분 각각 사용하였다.

[표 2] 정직 등 처분자에 대한 초과 사용 연가 일수 및 결근 처리에 따른 회수 비용 : “생략”

그 결과 지급되지 않아야 할 연가보상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하고, 잔여 연가일수가 없는데도 연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복무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정직·강등·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등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VI.

초과근무수당 등에 의하면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외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하면서 정직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정직·직위해제 등 처분으로 출근 근무일수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였어야 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당사자들은 복무 관련 규정과 지급된 급여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면 반납 등 시정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급 A 등 4명의 경우 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을 받아 출근 근무일수가 없는데도 [표 3]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일괄 지급하거나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데도 미달일수를 감액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총 1,444,30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정직 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부적정 지급 명세

: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앞으로 정직·강등·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당해연도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에서 제외하여 연가보상비가 과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업무처리 시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정직·강등·직위해제 등의 인사처분 사항을 확인하고, 시간외수당 지급이 불가한 자를 사전에 인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자들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잘못 지급된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은 즉시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앞으로 연가일수에서 정직·강등·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받은 자들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출근 근무일수가 없거나 15일 미만인 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일괄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에 따라 정직일수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598,180원을 회수하시고, 초과 사용한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보수감액 방법에 따라 총 2,279,98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의 잘못 저축된 연가 2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상황부를 정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에 따라 정직·직위해제 등 처분으로 인해 출근 근무일수가 없는 자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286,030원과 15일 미만 출근일수에 대해 감액하지 않고 일괄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58,270원 등 총 1,444,3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1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 계 · 주 의 요 구

제 목 관급자재(순환골재) 구매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과의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표 1] “순환골재 구매”에서 순환골재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하는 2인이상 수의견적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순환골재 구매” 현황 : “생략”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2인 이상 수의견적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가 관계법령 및 공고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인 이상 수의견적공고 방식으로 “□□□□ 관급자재 구입(순환골재)” 및 “★★★★ 관급자재 구입(순환골재)”에 대한 공고를 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순환골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하여 명시하였고, 개찰 후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개찰결과 1순위 업체인 ▽▽▽는 입찰참가자격인 순환골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10990401)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2순위 업체¹⁾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1순위 업체인 ▽▽▽와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가과는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2건의 관급자재(순환골재)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1) 2건의 공고에서 입찰참가업체는 각각 3개업체이며, 2건 모두 2순위 및 3순위 업체는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

- 관급자재 구매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관급자재 구매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유효하지 않은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천군 가과의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민간보조사업자인 “○○○○법인” 으로부터 계약대행 의뢰를 받아 [표 1] “ 도정시설 구입 설치”(이하 “도정시설 구입 설치”라 한다)를 입찰공고 및 낙찰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는 해당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도정시설 구입 설치” 계약 현황 : “생략”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

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개찰을 한 후에는 입찰참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유찰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2]와 같이 개찰결과 입찰참여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다고 판정하여 1순위 업체인 ◇◇◇를 선정하였으나, 2순위 ▽▽▽은 자격 요건에 미등록된 업체로서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1순위 업체 1인뿐으로써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유찰처리 후 지방계약법에 따라 재공고 등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도, 1순위 업체인 ◇◇◇와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결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와 계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도정시설 구입 설치” 개찰 현황 : “생략”

그 결과 가과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계약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신뢰를 훼손하고, 특정업체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입찰의 성립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입찰의 성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개인영상정보 열람 업무처리 소홀 등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연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규정」(이하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규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2. 개인영상정보 열람 업무처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정보주체¹⁾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 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

1)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열람 등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면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에 작성된 열람 목적 및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가과는 2021. 1. 1.부터 2023. 11. 20.까지 정보주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총 ○○건의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면서 [표 1]과 같이 청구인이 신청한 열람 청구서에 영상정보 기록기간, 설치장소 등의 내용이 누락(건수: 17건)되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열람 조치를 취하였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누락건수: 15건)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목적을 기록하지 않는 등 개인영상정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개인영상정보 열람 업무처리 확인결과 : “생략”

그 결과 청구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채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

3.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 미수립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규정²⁾ 제16조에 따르면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목적

2) 제정(시행) 2017. 7.13.

및 운영방향,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 등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와 영상정보처리기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협의 및 주민협조에 관한 사항, 통합관리되는 영상정보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기준 심의,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가과는 최근 3년간 관내 282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련 적정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고 경찰서 또는 민원인 요청 등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업무처리를 하는 등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열람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침을 수립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통합 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침을 수립하는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1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다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 ○○ 보조사업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다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다과(이하 “다과” 라 한다)는 ○○○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 ○○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 ○○ 보조사업 현황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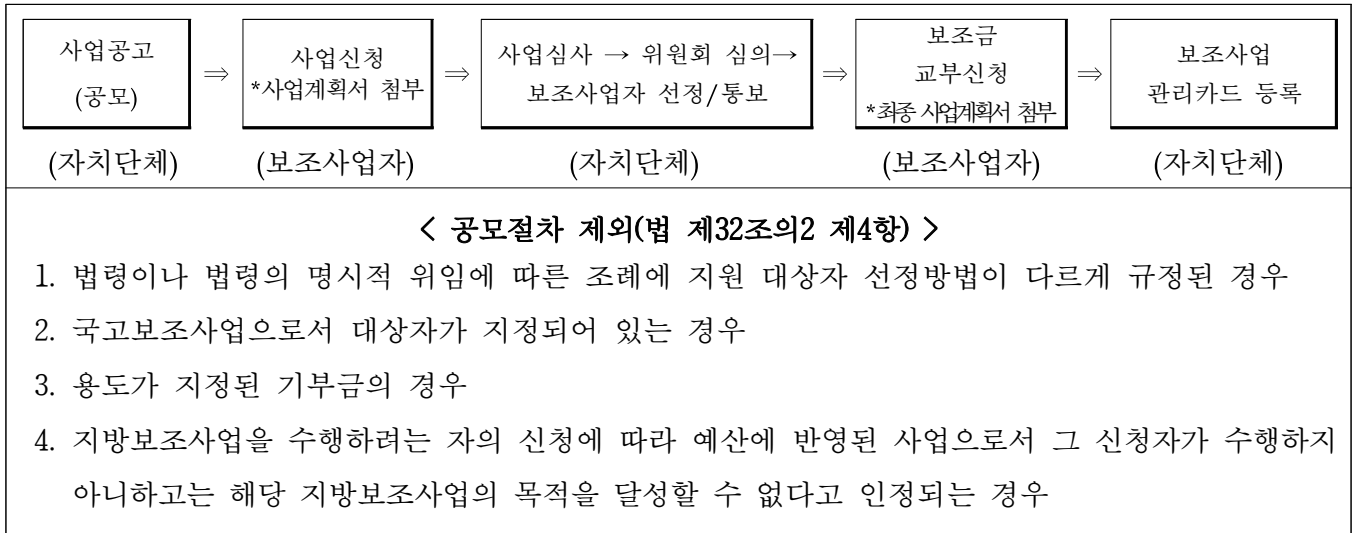
2.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사업공고(공모)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방법



또한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군수는 매년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다과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를 선정하려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고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금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다과는 ○○○ ○○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절차 없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으로부터 [표 3]과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보조금을 교부해 왔다.

[표 3] ○○○ ○○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 “생략”

그 결과 공모 절차를 거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부되어야 할 보조금이 특정 단체에게

교부되는 등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계약법 위반 등 정산검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하여 그 보조 금액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다과는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할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는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보조금 정산 시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회계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다과는 ○○○ ○○ 보조사업자(연천군 △△△)가 [표 4]와 같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공개적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특정업체인 ■■■■■와 (주)■■■■■ 등과 1인 견적서만으로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는데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 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 ○○ 사업” 물품구입 업체 계약 및 집행현황 : “생략”

그 결과 보조사업 수행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하지 못하여 보조사업자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다과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다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 검토 ·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다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국 다과(이하 “다과”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업무와 영업자의 식품제조가공에 관한 보고 사항을 검토 ·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품 생산 시작 전 · 후 7일 이내에 제품별로 제조 방법 설명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한 사항 중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 비율 등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도 시작 전 · 후 7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록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항목에는 등록관청에서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사항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으로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알기 쉬운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2020. 7. 30.)」의 품목제조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에 따르면 원료가 복합 원재료¹⁾인 경우 ‘원재료명’란에 식품 유형을 기재하고 ‘원재료 기타 설명’란에 복합 원재료의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혼합제제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혼합제제의 원료 성분으로 각각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첨가물은 해당 기준(사용량)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과는 영업자로부터 품목제조보고 받은 내역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정해진 식품의 유형별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사용기준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 반려하거나 보완하게 하는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다과는 2018년부터 2023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907건의 영업자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처리하면서 [표 1]과 같이 □□기업의 ‘ㄱ’ 제품 등 4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보고된 사항인데도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중 △△의 ‘ㄴ(기타가공품)’ 제품 1건은 소량이지만 실제 생산·유통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1]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내역 : “생략”

그리고 ○○기업의 ‘ㄷ’ 제품 등 5건은 [표 2]와 같이 품목제조보고 한 내용 중 원재료 및 성분명에 혼합제제²⁾로만 표기하여 상품명에 무엇이든지, 포함된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게 제출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 사용허용량을 검토할 수 없는데도 반려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 1)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처리·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이고, “복합원재료”라 함은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을 말한다. (출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2) 혼합제제란 식품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하거나 또는 희석한 것을 말한다. 다만, 혼합제제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따로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이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표 2] 혼합제제로만 표기되어 개별 사용기준 미확인한 품목제조보고 내역

: “생략”

또한 △△의 ‘ㄹ’ 제품 1건은 [표 3]과 같이 품목제조보고 한 내용 가운데 원재료 및 성분명에 사카린나트륨(식품첨가물)의 함량이 표기되지 않고 다른 원료의 함량 합계가 100%로 표기되어 해당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함유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도 적합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 성분함량이 표기되지 않은 품목제조보고 처리 내역 : “생략”

그 결과 먹거리 안전에 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관련자는 업무 미숙으로 잘못 처리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해당 품목제조보고 건에 대해 감사기간 중 품목중단, 변경신고 처리 완료하여 향후 동일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품목제조보고 검토·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관내 품목제조보고 사항에 대한 첨가물 등 기준 규격 적합 여부 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8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복지업무 민간위탁 지도감독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는 「지방자치법」과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군 민간위탁 조례” 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간위탁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군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연천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다과는 2021. 9. 29.자로 “연천군 민간위탁사무 관리강화방안 통보” 문서를 실과소에 통보하여 민간위탁사무 감사할 때 5억 이상 10억 미만인 민간위탁 사무는 나과 □팀의 협조를 받아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천군 가과는 [표 1]과 같이 □□□□□ 등 4개 시설을 위탁근거에 따라 각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 군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제18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며, 제22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예산액 5억이상 10억 미만의 민간위탁 사무는 나과 □팀의 협조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표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현황 : “생략”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연천군 가과는 [표 2]와 같이 □□□□□ 등 4개소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면서 군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시한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천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 등 2개소에 대한 성과평가와 그 결과 공개를 하지 않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감사 시 예산액이 5억 이상이고 10억 미만인 민간위탁 사무는 나과 □팀의 협조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등 2개소에서 자체감사 처리토록 하는 등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표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처리현황 :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연천군 가과 ○팀은 앞으로 사무편람 비치, 감사, 수행기관의 성과 평가 등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지침 등을 좀 더 면밀히 확인, 검토하여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팀과 ◇팀도 민간위탁사업 운영시 관련 법률 및 업무 지침을 정확히 확인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 기관의 승인을 받고 시설에 비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19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1), 제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7과 관련하여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법제처 해석 19-0491)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

1호의 2부터 제1호의 9까지 및 제2호의 2²⁾부터 제2호의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3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사자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7부터 제1호의 9에 해당되는 사람, 제2항 제2호에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4항에 따르면 노인관련기관³⁾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장애인관련기관⁴⁾의 설치 신고·허

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노인관련기관(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① 노인복지시설, ② 장기요양기관, ③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④ 건강가정지원센터, 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⑥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⑦ 의료기관, ⑧ 장애인복지시설, ⑨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⑩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⑪ 독거노인조합지원센터, ⑫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⑬ 치매안심센터

4) 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② 노인복지시설, ③ 장기요양기관,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⑥ 의료기관, ⑦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⑧ 활동지원기관, ⑨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⑩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

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⁵⁾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의 II. 사회복지시설 공동적용사항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에 따르면 시설장 및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천군 가과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의 동의를 받

원센터

5) 아동관련기관(「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① 보장원,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②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③ 건강가정지원센터,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⑤ 성매매피해상담소, ⑥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⑦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⑧ 유치원, ⑨ 의료기관, ⑩ 장애인복지시설, ⑪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⑫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⑭ 청소년활동시설, ⑮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⑯ 청소년보호·재활센터, ⑰ 체육시설, ⑱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⑲ 학원, 교습소, ⑳ 한부모가족복지시설, ㉑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㉒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㉓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㉔ 서비스제공기관, ㉕ 입양기관, ㉖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연천군 가과는 [별표 1]과 같이 □□ 등 20개 시설에서 시설장과 종사자 125명이 취업할 때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가 결격사유 여부의 확인 절차 없이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연천군 가과 □팀은 ○○시설 종사자 채용 시 결격사유 여부의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확히 연찬하여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시설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팀은 이전 관련 담당자가 보고한 문서등록대상에 확인해 본 결과, 채용 당시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였지만,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결과보고는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후 종사자를 채용할 때 결격사유를 포함한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여 업무 절차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팀은 종사자 채용시 일부 종사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자격요건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관련 법률 및 업무 지침을 정확히 확인하여 종사자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팀은 앞으로 △△시설 종사자 채용 시 결격사유 여부의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연찬을 통하여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시설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사회복지

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1] 사회복지시설 범죄경력 미조회 내역 : “생략”

일련번호	2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전기요금 감면 미적용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제41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제41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2006년부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 약관」 제67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2016년 12월까지의 공급가액의 20%, 2017년 1월 이후로는 공급가액의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심야전력의 경우에는 약 31.4%를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부담을 감면하고 있다.

따라서, 연천군 가과는 어린이집에 시설 운영비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면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등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연천군 가과는 [표 1]과 같이 ■■■ 어린이집 등 2개소가 전기요금의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기요금 납부액 총 6,066,030원에 대한 감면(30%) 예상금액 약 1,819,800원을 절감받지 못하고 납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

[표 1] 어린이집 공공요금 납부현황 (2021. 1. ~ 2023. 9.) :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연천군 가과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어 인지하지 못하였고, 향후 지도점검 및 주기적인 확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 ○○ 분야 보조금 정산 자료 검사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및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이하 “□□” 이 라 한다) 및 △△(이하 “△△” 라 한다)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 ○○ 분야 보조사업 업 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전 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 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 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의 정산 검사를 하여 그 보조 금액을 확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가과는 보조사업자인 □□ 및 △△에서 보조 사업을 완료하면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때 전자세금계산서 등 정산자료의 누락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부당한 대금 청구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 및 △△가 2022. 10. 26.부터 2023. 3. 4.까지 제출한 2022년 ○○ ○○ 분야 16개 보조사업의 정산자료에 [별표] “2022년 ○○ ○○ 분야 보조사업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현황” 과 같이 9개 사업에서 17건, 50,862천 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는데도 감사 기간(2023. 11. 28.)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사업별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살펴보면 ‘●●●’ 등 6개 사업의 정산자료에서 발급되지 않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가 12건, 42,682천 원이 첨부되어 있었는데도, 정산 검사 시 정당한 전자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조금 사용액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 등 3개의 사업은 5건, 8,180천 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감사 기간까지 정산 검사를 하지 않았다.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과는 보조금 정산 검사 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정산 검사 시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과 일부 보조사업 정산 검사가 지연된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 ○○ 분야 보조금 정산자료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및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발급 사실이 없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이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고발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2022년 ○○ ○○ 분야 보조사업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현황 : “생략”

일련번호	2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가축분뇨 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가축분뇨 배출시설 행정처분 기준 적용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은 [표 1]과 같다고 되어 있다.

[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축 종	규 모 별	제한거리
도시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전 축종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전부 제한
도시 지역 이외의 지역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에서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다만, 조례 시행일 기준 호수로 적용한다.)	소, 젖소, 말	신고대상배출시설 및 규모미만 시설	1,000미터 이내
			허가대상배출시설	1,000미터 이내
		돼지	신고대상배출시설 및 규모미만 시설	1,000미터 이내
			허가대상배출시설 (1,000㎡ ~ 2,000㎡ 미만)	1,500미터 이내
			허가대상배출시설(2,000㎡ 이상)	2,000미터 이내
		닭, 오리, 메추리	신고대상배출시설 및 규모미만 시설	1,000미터 이내
			허가대상배출시설	1,500미터 이내
		양, 사슴	신고대상배출시설 및 규모미만 시설	1,000미터 이내
		개	신고대상배출시설 및 규모미만 시설	1,000미터 이내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7] 2호 가의 4)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폐쇄명령 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조례로 정한 규모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폐쇄명령 처분을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 조례로 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2개 사업장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행정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폐쇄명령 처분하지 않고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하였다.

[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위반 사업장 처분 내역 : “생략”

그 결과 폐쇄명령을 내려야 할 사업장에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하면서 동일사항으로 폐쇄명령을 처분받은 사업장과의 형평성이 저해되었으며, 법으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행정청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가축분뇨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조업정지·영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허가(등록, 인가 등 포함)취소 등 그 처분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 가동 또는 영업행위 등이 중단되는 처분을 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표 3]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3]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

행 정 처 분 사 항		확 인 시 기		확인횟수 (확인주기)
처분명	처분기간	최초확인	최종확인	
조업 또는 영업정지	1개월 미만	처분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	처분종료일	2회 이상
	1개월~6개월 미만	위와 같음	처분종료일 이전 3일 이내	3회 이상
	6개월 이상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회 이상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위와 같음	행정명령이행 완료시 까지	(처분개시일로부터 1개월 간격)

자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발췌

따라서 가과는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하였을때에는 처분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 처분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4]와 같이 15건의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한 후 처분시작일로부터 최대 11개월 넘게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 사후관리를 소홀하게 하였다.

특히 A의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 이행 시작일이 2020. 11. 25. 이었으나 2021. 10. 25. 해당 견사에서 아직 개를 키우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에 의해 처음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용중지명령을 미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2021. 12. 16. 사용중지명령 미이행에 따른 폐쇄명령처분을 하였으며 B의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 이행 시작일이 2022. 4. 1. 이었으나 3개월이 지난 2022. 7. 4. 현장에 출장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용중지명령을 미이행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폐쇄명령)하고자 한다고 출장복명 하였으나,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4] 가축분뇨 배출시설 행정처분 사후관리 내역 : “생략”

그 결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처분 이행 완료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적법하게 동일한 처분을 받아 즉시 이행을 완료한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하여 숙지가 미흡하였으며,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가축분뇨 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 업무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부과	재정상 조치금액	\$\$\$\$\$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의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조치명령 등의 업무 및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의 인·허가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¹⁾.

2.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오류 입력 과태료 미부과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

1)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한 사무임

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폐기물관리법」제45조 제2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올바로시스템” 이라 한다)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중 불일치 인계정보 및 기한초과 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사용자에게 통보(올바로시스템 게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올바르게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올바르게시스템 상 발생한 사업장 전자인계서 오류내역에 대해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에 오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사실을 확인한 후 미입력 및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담당자가 올바르게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상황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자인계인수서(확정)입력기한을 초과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의 오류인계내역에 대한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표 1]과 같이 10건의 과태료(5,000천 원)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올바르게시스템 오류인계 과태료 미부과 내역 : “생략”

그 결과 사업자가 오류사항(불일치, 기한초과)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자치 단체의 장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지도·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2의 폐기물처리·배출사업장(의료폐기물 사업장 포함) 및 폐기물 자가처리시설 지도·점검 횟수는 [표 2]와 같이 정해져 있다.

[표 2]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횟수 : “생략”

따라서 가과는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관하여 최소 년1회 이상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3]과 같이 3년간 점검대상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412개소 중 55개소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 “생략”

그 결과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연천군 폐기물 관리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대면점검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며 향후 지적사항에 따라 폐기물 관련 업무에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일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발생한 폐기물을 인계·인수하면서 올바로시스템에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을 초과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총 5,000,00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현장확인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가동개시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¹⁾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8조 제6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1,2종 배출시설 및 산업단지 내 설치된 배출시설 등을 제외하고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됨

항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가동개시신고(가동시작 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 일치한지 여부 등을 현장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허가사항과 일치하게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표]와 같이 36건의 가동개시 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인·허가 사항과 일치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현장확인 하지 않았다.

[표] 가동개시 신고수리 후 현장 미확인 사업장 내역 : “생략”

그 결과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인·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어 대기환경오염물질이 부적정하게 처리될 우려를 낳게 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지적된 사항을 수용하면서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현장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가동개시 신고 수리 시 허가 (신고)사항과 일치하게 운영하는지 현장확인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요구

제 목 폐기물 종량제봉투 검수 절차 이행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는 「폐기물관리법」 및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고있으며, 종량제봉투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양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Ⅲ-1-다-5) 및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인쇄상태, 겉모양, 색상, 묶는선 표시,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붙임 3]에 따르면 검수담당 공무원이 검체를 채취하여 개봉이 불가능한 봉투 등에 담아 봉인한 후 공인 시험기관에 겉모양, 찢어짐, 인장장도, 신장율, 노치후 인열강도, 함량 및 접합상태 등에 관하여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직접 통보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가과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업체로부터 제작완료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문 등으로 직접 통보받은 후 분석결과가 적합 할 경우에만 물품을 검수하고 인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표]와 같이 종량제 봉투 6,675,000매의 제작 완료 통보를 받고 시험성적서가 통보되기 전 표준규격의 적합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검수 및 인수하였다.

[표] 시험성적서 통보 전 종량제봉투 시험성적서 통보 전 검수 내역 : “생략”

그 결과 제작된 쓰레기 시험성적서 통보 전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아 배부하면서 기준에 부적합한 봉투가 유통될 수 있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지침 및 조례를 숙지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앞으로, 제작이 완료된 쓰레기 종량제봉투 검수 전 시험성적서 결과를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구입 예산 지급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는 2022년 경기도에서 추진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34,200천 원을 교부받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의 구입 및 보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회계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6호에 따르면 공사비·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그 세출이 소속된 회계연도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으며, 각 실·과장은 일상경비등으로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2022년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구입을 건의하고 물품 납품에 따라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물품 검수 완료 후 해당년도인 2022년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구입을 명목으로 도비를 교부받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34,200천 원을 사용하여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구입 의뢰 후 물품 납품에 따라 대가의 지급이 청구되어 검수까지 완료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2,811개의 대금 34,190,850원 중 [표 1]과 같이 1,610개에 대한 대금 19,778,8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1개에 대한 대금 14,412,000원은 2022년 회계연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표 2]와 같이 2023년 1월에 2023년 당초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을 위해 군비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여 14,412,000원을 지급하

고 2022년에 지급되지 않은 도비 14,412,000원은 도에 반납처리하였다.

[표 1]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물품 대금 지급내역 : “생략”

[표 2]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물품 대금 지급내역 : “생략”

그 결과 납품기한에 맞춰 제조한 물품을 납품한 사업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물품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하였으며, 해당연도에 납품완료된 물품 대금이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되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2022년 12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보관용기를 납품받은 후 지방재정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대금이 지급 되지 않은 사실을 2023년 1월에 인지했으나, 출납폐쇄 예외 기한도 마감됨에 따라 2023년 1월 군예산으로 물품비를 지급하였으며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물품대금 지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등 물품구입 대금 지급 시 지방재정프로그램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적기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다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 · 감독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다과, 라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 다과, 라과(이하 “가과 등”이라 한다)는 「조성사업 등 13건의 건설공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별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승인 및 건설기술자 배치 현황”과 같이 품질관리 지도 ·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승인 절차 미이행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건설사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

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착공 전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가과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에 따라 그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관내 건설공사 13개소 중 11개소의 건설사업자가 품질시험계획서를 가설 등에 제출하였으나 그 적정성 등을 심사하거나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2개소의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거나 가과 등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적절한 조치 없이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를 낳게 하였다.

3. 건설공사 품질시험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 여부 확인 미이행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표]와 같이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구 분	공 사 규 모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연면적 5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특급1명, 중급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 500~1000억원 건설공사, 연면적 3만~5만㎡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고급1명, 중급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500억원 건설공사, 연면적 5천~3만㎡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중급1명, 초급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 2~100억원 건설공사 연면적 660~5천㎡ 건축물 공사	초급1명 이상

자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편집

따라서 가과 등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관내 건설공사 13개소 중 4개소의 건설사업자가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는데 건설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건설공사 현장에 품질을 관리하는 건설기술인 공백으로 인해 공사품질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를 낳게 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 등은 품질시험계획의 심사 및 승인, 건설기술인 배치 여부 확인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법령 및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연천군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건설공사 추진 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품질시험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 부과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승인 및 건설기술자 배치 현황 : “생략”

일련번호	28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다과, 라과, 마소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수행 평가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다과, 라과, 마소)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마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 다과, 라과, 마소(이하 “가과 등” 이라 한다)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그 사업 외 2개소 2용역 등 11개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엔
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
역,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을 완료하면 [표]와 같이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
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평가 대상 및 시기

용역 구분	평 가 대 상 사 업	평 가 시 기
기본설계	계약금액 2억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자료: 「건설기술 진흥법」 편집

따라서 가과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별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업무수행 평가 미이행 현황”과 같이 건설공사를 위해 발주한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11개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수행 평가를 규정된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수행 평가제도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건설기술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법 취지를 훼손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 등은 관련 법령과 업무 미숙으로 인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면서 감사기간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평가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여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앞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시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수행 평가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고 업무수행 평가를 하지 아니한 11개 사업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업무수행 평가 미이행 현황 : “생략”

일련번호	29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지방도 도로점용(굴착) 허가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도로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지방도의 점용(굴착) 허가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의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를 마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서에 설계도면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준공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주요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라면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도로의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하였다면 수허가로부터 허가 기한까지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허가한 도로구역을 확인하거나 수허가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도로점용(굴착) 허가의 취소 또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등 도로점용(굴착) 허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수허가자가 지방도 내에 주요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표]와 같이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고 허가기한 내에 도로의 굴착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수허가자로부터 준공확인신청서, 준공도면 등을 제출받거나 허가한 도로구역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지방도의 도로점용(굴착) 허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도로관리청이 준공 확인하지 아니한 지방도 내 도로점용(굴착) 허가 현황 :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지방도 내 주요 지하매설물의 도로점용(굴착) 공사의 준공 확인 및 준공도면 보관·관리 등의 도로점용(굴착) 허가 업무가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연천군 종합감사 기간 중 도로점용(굴착) 허가 후 준공 확인을 득하지 아니한 수허가자에게 공문을 시행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향후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을 연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내용에 반영하고 도로점용 허가조건에 명시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앞으로, 지방도의 도로점용 허가 시 「도로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도로관리청에 준공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도로점용(굴착) 공사 8건은 허가조건에 따라 공사가 실시되었는지 검사하고, 준공도면, 지하시설물도 등을 제출받아 보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도로점용(굴착) 공사를 완료하고도 도로관리청에 준공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수
허가자에게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3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소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ㄱ사업 암판정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소)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소(이하 “가소” 라 한다)는 2021. 8. 2.부터 현재까지 ㄱ사업을 위해 □□를 건설사업자로, △△과 ㉠㉠를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독 권한대행 업무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 변경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실정보고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

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이하 “건설공사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통해 발주청,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업무지침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안전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안전선 노출 즉시 안전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안전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 안전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2022. 4. 14. ㄱ사업 현가 추진구간의 지반굴착 중에 안전선이 발견되어 지반조사를 통해 경암으로 판정하고 추진공법을 변경하는 실정보고를 하였다면, 건설공사 업무지침에 따라 추가 시험과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선을 명확히 판정하였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정보고를 승인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소는 2022. 4.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한 ‘ㄱ사업 철도추진구간의 실정보고’ 중 ㄴ추진구간의 안전선을 검토하면서 안전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여부,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인의 검토의견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2022. 3월 △△에서 수행한 지반조사 결과 경암으로 판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2022. 4.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안전정과 추진공법의 변경에 대한 실정보고를 승인하여 건설공사 업무지침 제12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지도·감독 업무를 소

홀히 하였다.

그 결과 가소는 발주청으로서 건설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시켰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소는 ㄱ사업 ㄴ추진구간을 이토식 공법(D=450mm)으로 굴착 중에 암반이 노출되어 ‘22. 1. 19. 1차 암판정위원회를 통해 연암으로 판정하고 공사비 증액 없이 이토식 공법의 굴착구경을 D=600mm로 확대하여 진행하였으나, 굴착기계가 추진 도중 멈추어 암반선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장여건과 별도의 지반조사 결과를 통해 경암으로 판정된 점을 고려하여 2차 암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정보고를 승인하였으며, 향후 직무 연찬을 통해 암판정위원회 절차를 숙지하고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선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별도의 지반조사를 실시한 후 경암으로 판정한 현장실정을 보고한 경우, 건설공사 업무지침 제98조 제2항에 따라 암판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암판정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러므로 현장여건과 별도의 지반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암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정보고를 승인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앞으로, 건설공사 추진 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암판정 업무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 부과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3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다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징계 ·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및 생활숙박업 신고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다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징 계 대 상 자
 ① 가국 가과 ○급 A
 ② 가국 가과 ○급 B
 ③ 나국 다과 ○급 C

징 계 종 류 ①~③ 경징계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건축법」,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가 및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 변경 업무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천군 다과(이하 “다과”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영업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가 및 건축물대장 표시 사항 변경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축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1) [시행 2021. 11.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04호, 2021. 11. 2., 제정]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 중 제4항 각 호²⁾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³⁾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단독주택(가목)은 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고, 숙박시설(다목)은 제5호 영업시설군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영업시설군인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2021. 11. 2. 일부개정⁴⁾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 가목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 제3조는 [별표 1] 제15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이나 신고를 하는 생활숙박시설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제정·고시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
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2)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3)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
4)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한편, 「건축법」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하고,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표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2021. 11. 2. 이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는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적합한 구조인지 등을 확인하고 용도변경 허가를 처리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1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받아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2]와 같이 2021. 11. 2. 이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3건의 건축물에 관하여 프론트데스크, 로비, 린넨실, 식음료시설, 객실관리(제어)시스템

설계도서 포함 여부 등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적합한 구조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용도변경 허가를 처리하였고, 3건 모두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데도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을 받지 않고 용도변경 허가일에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표 2]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가 현황 : “생략”

그 결과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시설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숙박시설이 제공되도록 규제하고 있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생활숙박업 신고 처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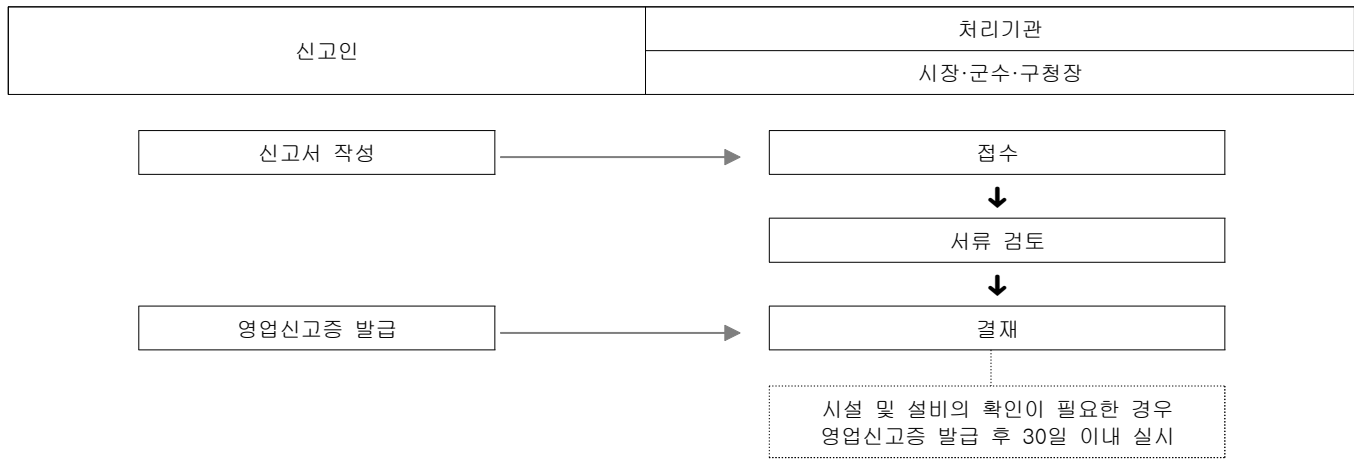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II.-1.-바.-기타 관계법령 참고사항에 따르면 접객대, 로비시설 등은 판례⁵⁾에 따라 필수 시설로 해석되고, 접객대, 로비 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설치하되 별도로 영업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동에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는지에 따라 현장 판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이하 ‘시설개요서’라고 한다),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수료증

5) 접객대 필수설치 관련 판례(부산고등법원 2012.7.25. 선고 2012누584 판결): 행정청은 숙박업 신고 심사 단계에서 영업주체의 구분을 뚜렷하게 하고,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법 및 시행규칙에 정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숙박업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봄(출처: 2023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 제3항 따라 영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림 1]과 같이 영업 신고 접수 건에 대한 서류 검토 및 결재 이후 신고증을 교부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내준 후 30일 이내에 확인하게 되어 있다.

[그림 1] 공중위생영업 신고서 중 처리절차



자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영업신고서 재구성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1.-라.(1)에 따르면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 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 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 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다과는 생활숙박업 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시설개요서 등 구비서류 누락 등의 흠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구비서류가 누락 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면 신고 수리 전에 보완을 요구하여 보완된 이후에 신고증을 교부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자의 사정으로 시설개요서 등의 서류를 제출없이 영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30일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을 하

는지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다과는 2021. 10. 27. [표 3]과 같이 주식회사 □□, 2022. 2. 9. ◇◇, 2023. 3. 31. ㉠㉠의 각 생활숙박업 영업신고를 처리하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개요서를 제출하지 않아 시설기준의 충족 여부를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데도 건축물대장만 확인하고 대장에 표기되지 않는 접객대 등의 설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를 수리하여 영업신고증을 교부하였다.

더욱이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지침에는 위 3건의 경우와 같이 영업소가 별도로 구성될 때는 구체적인 형태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와 같은 숙박업 영업신고 처리 건의 경우는 면밀하게 현장 확인을 하여야 했으나 현장 점검 시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다.

[표 3] □□번지 일대 생활숙박업 영업신고 처리내용 : “생략”

그 결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생활숙박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생활숙박업자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영업을 영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업무 담당자 등의 위법한 업무 처리

가과 □팀 A은 2020. 10. 16.부터 2022. 3. 13.까지, B은 2022. 7. 18.부터 2023. 9. 20.까지 ●●면 용도변경 허가 및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2020. 7. 1.부터 2022. 2. 13.까지, E은 2022. 3. 14.부터 2024. 1. 4.까지 □팀장으로 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과 ○팀 C은 2021. 9. 10.부터 2023. 8. 31.까지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F는 2021. 7. 8.부터 2024. 1. 4.까지 ○팀장으로 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A의 경우

위 사람은 용도변경 허가 업무를 하면서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 가목,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에서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다.

반면,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 행정청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을 변경하는 권한이 없고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담당 기간에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관련 규정을 임의로 적용 제외하여 2021. 12. 27. 단독주택에서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건을 처리하였고, 민원 처리와 업무의 연속성을 사유로 용도변경 허가일에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2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B의 경우

위 사람은 용도변경 허가 업무를 하면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단독주택에서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다.

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별도로 고시되어 있다는 것과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 행정청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을 변경하는 권한이 없고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담당 기간에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관련 기준이 고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2023. 3. 9. 단독주택에서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는 사유로 용도변경 허가일에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건축물대

장의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2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C의 경우

위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인 생활숙박업 영업신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과 사업 지침인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를 알고 있었으며, 영업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로 시설개요서를 받아야 하고 해당 서류를 통해 시설의 위치나 설비를 갖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업무지침을 세밀히 숙지하지 않아 접객대 등이 필수 시설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신고서와 함께 받아야 하는 구비서류를 임의로 판단하여 건축물 대장으로 갈음하여 처리하였다.

그 결과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 D과 E의 경우

위 사람들은 A과 B의 직상급자인 □팀장으로서 담당자가 기안한 단독주택에서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하는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하였고, 담당자가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였는데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그 결과 “2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 F의 경우

위 사람은 C의 직상급자인 ○팀장으로서 담당자가 기안한 신규 신고 수리 사항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적합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하였고,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한 민원 처리 건에 대해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그 결과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와 다과는 이번 감사 결과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변경 허가 및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 변경 업무, 생활숙박업 영업신고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A과 B의 경우

가과 A과 B은 이번 감사 결과를 인정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연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현재 담당자가 시정 중인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A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용도변경 처리 시 자동으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이 연계 생성되어 직권으로 변경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시스템상 기능이 있었고, B은 민원 편의를 위해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없이 건축물대장을 변경하였으며 당시 하위직급자로서 인근 번지 유사사례를 참고해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5. 15.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전번호 18-0076)⁶⁾에 따르면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만 시장·군수 등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규칙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 및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이 용도변경 허가 이후 당연히 신청될 민원이었다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없이 민원 편의 등을 사유로 직권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C의 경우

6) 안전명: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별도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다과 C는 코로나19 대응과 위생 분야 업무 전반을 처리하면서 신고 수리 당시 건축물대장 주용도를 확인하였고, 라과에 관계 법령 저촉 여부를 구두로 문의하였으며, 이후 현장 점검하여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등 법령 및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 출장 사실과 시설이 적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영업신고의 근거가 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위법 여부는 다과 ○팀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서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다. D, E, F의 경우

D, E, F는 2023. 11. 29. 가과와 다과에서 위반 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있고, 앞으로 팀장으로서 관련 법령을 연찬하여 직원을 제대로 지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가 및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 변경 업무를 처리한 A, B의 행위와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생활숙박업 영업신고를 처리한 C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가 및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 변경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고, 생활숙박업 영업신고 수리를 위법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가 및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 변경 업무와 생활숙박업 영업신고 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

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건축법령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가 및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 변경 업무와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생활숙박업 신고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생활숙박시설의 사용 전 단계부터 관련 법령을 소관 하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건축법령을 위반한 생활숙박시설 2개소와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생활숙박업소 4개소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사용·영업 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3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다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업무 미수행 등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다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 및 다과(이하 “가과 및 다과”라 한다)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ㄱ설계용역”과 “ㄴ용역”을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사항¹⁾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1. 주변 유사시설·유희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5.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6.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서 설계²⁾비 추정가격³⁾이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 각 호로 정하는 전문가⁵⁾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및 다과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분야 전문가 등에게 건축기획 업무 수행을 의뢰하여야 했고,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계용역을 추진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 및 다과는 [표]와 같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용역 각 1건을 발주하면서 건축분야 전문가 등에게 건축기획 업무 수행을 의뢰하지 않았고,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의뢰하는 등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추진하였다.

[표] 공공건축 사업 설계용역 추진 현황 : “생략”

그 결과 공공건축물이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으로 건축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함

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건축설계업무로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모두 포함하는 업무대가를 의미함

4)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심의 가능

5) 1.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가과 및 다과는 이번 감사 결과를 인정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건축 사업 설계용역 추진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용역을 추진한 아래 관련자를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공공건축 사업 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비 추정가격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공공건축 심의 등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주등¹⁾에게 시정명령²⁾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0조 제5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³⁾

1)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3) 「연천군 건축조례」 제34조 제2항에 따라 1년에 1회로 규정함

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는 해당 조문은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명령 이후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최초의 시정명령 이후의 반복 부과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가 아니라고 유권해석⁴⁾ 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위반건축물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연 1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 1]과 같이 2020. 1. 1.부터 2023. 8. 31.까지 총 161개소의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개소의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63개소 중 30개소의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지 않았다.

[표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현황 : “생략”

이로 인해 [표 2]와 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5개소와 [표 3]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지 않은 30개소 등 3년 8개월 간 총 35개소의 위반건축물이 방치되었고,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 추정액 누계가 84,283,620원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 : “생략”

[표 3]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미부과 현황 : “생략”

아울러 가과 A 등 4명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표 4]와 같이 35개소의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이 총 42건에 달하였다.

[표 4] 업무 담당자별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 :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4)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998(2022. 4. 1.)호

가과는 이번 감사 결과를 인정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별표 1]에 기재된 5개소의 위반건축물과 [별표 2]에 기재된 30개소의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상세 현황 : “생략”

[별표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미부과 상세 현황 : “생략”

일련번호	3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 신고 등 가설건축물 관리업무와 「연천군 건축조례」 운용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해복구,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¹⁾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²⁾ 제15조 제7항³⁾은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

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3)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르면 제15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 5. 3.)부터 시행하고, 제4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5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⁴⁾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위반일자, 내용 및 원인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야 했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일자, 내용 및 원인을 표시하여야 했으며, 위반내용이 시정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했다.

또한 건축법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를 「연천군 건축조례」에 정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별표]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현황” 과 같이 2021. 1. 1.부터 2023. 8. 31.까지 총 374개소의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법령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될 때

4) 「연천군 건축조례」에 정한 바 없음

까지 관리하여야 했는데도 관리하지 않았으며, 그중 12개소는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를 경기도 종합감사 본감사일 현재까지 「연천군 건축조례」에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74개소가 적법하게 관리되지 않았고, 2022. 5. 3. 이후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에 관한 존치기간 연장 횟수가 「연천군 건축조례」에 정해지지 않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업무처리 시 연장 횟수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이번 감사 결과를 인정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겠고,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에 관하여 건축조례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앞으로,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이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연천군 건축조례」 개정 및 운용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별표]에 기재된 374개소의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될 때까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현황 : “생략”

일련번호	3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기관경고,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 태만
소관기관(부서) 연천군 (가과)
조치기관(부서)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자 등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부과 ·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서류 조사 소홀로 인한 과징금 부과 누락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위반행위를 한 자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외부기관(국세청, 경찰, 검찰 등) 통보자료 뿐만 아니라 검인 접수되는 판결서등의 관계서류를 조사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1]과 같이 판결서의 검인이 접수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A 등 3명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위 3명의 명의신탁 혐의자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하지 않았다.

[표 1] 검인된 판결서등의 조사 소홀에 따른 과징금 미부과 현황 : “생략”

그 결과 가과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3명에 대한 과징금 1억 2,364만원 부과를 누락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탈법행위 등을 제재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미부과로 인한 제척기간 도과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해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 대법원 관례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이며(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등).

따라서 가과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명의신탁 행위를 확인하고,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과징금 납부를 고지하여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1]의 연번 1과 같이 검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여 명의신탁 혐의자에게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표 2]의 연번 1과 같이 감사일 현재(2023. 11. 20.) 명의신탁 종료일(2018. 4. 11.)로부터 과징금 부과제척기간(2023. 4. 11.)이 도과되어 명의신탁자 A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징금 109,811,820원을 더 이상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예상 과징금 미부과 현황 :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당시 담당자의 업무 숙지가 미숙하였고 기존 감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와 현안 업무를 함께 처리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누락이 발생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심도있는 관심과 업무 협력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담당자의 업무가 이원화 관리되고 있어 부서 내에서 팀 간 업무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발생하였기에 팀 간 분리되어 있었던 업무를 일원화 조치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판결서등 관계서류의 조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부과된 과징금 13,835,000원을 조속히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제 2024 - 1 호

기 관 경 고

기 관 명 : 연천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하고 제척기간을 도과한
사실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오니,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2. .

경 기 도 지 사

일련번호	3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다과, 라과, 마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훈계 ·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인·허가 업무처리 시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소 관 기 관 연천군 (가과, 다과, 라과, 마과)
조 치 기 관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 다과, 라과, 마과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이하 “위 업무처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및 관광농원개발 승인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1항,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공급¹⁾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부동산

1) 토지의 조성 건설공사, 건축 등으로 설치되거나 설치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개발과정 도중의 인·허가 명의양도·사업주체 변경 등(부동산개발업법 제2조 제5호 및 질의회신 참조)

산개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인·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최초 인가·허가·지정·결정·승인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및 개발업 등록 사본을 제출받아 등록 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 아닌 본인이 직접 사용 목적일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후 인·허가 명의변경 등 일체의 공급행위가 제한됨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다과, 라과, 마과는 최초 인·허가 시 부동산개발업법과 위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인지, 직접 사용할 목적인지를 구분하여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후 인·허가 명의변경 등 일체의 공급행위가 제한됨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기도는 [표 1]과 같이 매년 31개 시·군에 위 업무처리 기준을 통보하면서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의 인식 부족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허가를 처리하여 감사 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1]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철저 문서 시행 내역 : “생략”

그런데 가과, 다과, 라과, 마과는 [표 2]과 같이 ○○번지 등 19건의 인·허가에 대하여 건축물의 연면적과 토지의 면적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면적에 해당되는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서 또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고 인·허가 처리 하였다.

[표 2]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 미징구 현황 : “생략”

그 결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최초 인·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 ◆◆ 등

19명이 인·허가 이후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하여 공급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할 우려를 낳게 하였다.

3. 무등록 개발업자의 부동산 공급행위(인·허가 명의양도) 부당 허가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위 업무처리 기준 및 법제처 유권해석(14-0051, 2014. 5. 9.)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자를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개발행위에 대한 최초 인·허가를 받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사용 목적으로 최초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최초에 타인에게 공급목적이 있던 부동산개발업자도 부동산개발업법상의 규제를 회피하여 부동산 등을 모두 조성한 후 이를 타인에게 공급하기 직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최초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면적에 해당되나,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직접 사용으로 신고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받은 자가 인·허가 변경(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도지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에 협조하게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라과는 2020. 3. 19. ▲▲번지의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를 하면서 토지의 면적이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면적임을 확인하고 □□법인 대표 B에게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 받았는데도 이를 경기도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표 3]와 같이 2022. 5. 6. □□법인 대표 B가 인·허가 관계 양도양수 승낙

서를 제출하여 건축주를 □□법인에서 C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로서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위할 수 없는 행위인데도 2022. 5. 6. 변경 신고를 부당하게 허가 하였다.

[표 3]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인·허가 명의변경 처리 현황 : “생략”

그 결과 사업시행자 □□법인이 최초 인·허가 전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3억 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2명 이상)의 운영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절감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위 사실을 확인하며 앞으로는 인·허가 업무처리 시 관계 법령 및 기준, 매뉴얼 등의 업무연찬을 철저히 이행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인·허가 업무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인·허가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 인·허가를 받은 ◆◆ 등 19건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공급외 목적) 대상 확인서 및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을 경기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 인·허가 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인·허가 명의변경

등 사업주체 변경)한 □□법인에 대해 경기도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고발 조치 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3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읍, 자면, 다면, 라면, 마면, 바면, 사면, 아면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연천군 (가읍, 자면, 다면, 라면, 마면, 바면, 사면, 아면)
조 치 기 관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읍, 자면, 다면, 라면, 마면, 바면, 사면, 아면은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아 취득요건 및 농지 소유 상한 등을 검토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농업인”이란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부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59호)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에 따라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면적에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 미만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농지법」 제10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처리 시 취득하려는 농지를 포함하여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 소유 상한 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를 취득한 세대를 발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1천㎡ 이상의 농지취득자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연천군 자면, 다면, 바면, 아면은 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세대당 소유한 농지의 총합이 1천㎡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발급하여야 했는데도 [표 1]와 같이 나면 황지리 650-3번지 등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43건에 대하여 세대당 소유한 농지의 총합이 1천㎡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특히 아면 원당리 ●번지, ㉠번지, ●번지는 신청 당시 개별 면적이 1천㎡를 초과한 면적인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고, 그 결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소유 상한 제한 면적을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농지소유상한(세대당 1천㎡)을 초과하여 발급한 현황 : “생략”

나. 개인이 아닌 농업경영인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연천군 가읍, 라면, 마면, 사면은 [표 2]와 같이 A 등 6명이 신청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대하여 기존에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기존 발급 현황 및 자격요건 검토를 소홀히 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표 2] 농업경영인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 “생략”

4. 관계기관 의견

위 사실을 확인하며 앞으로는 관련 법 및 관련 규정 적용에 적정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처리 시 「농지법」 등에 따라 취득목적 등 발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앞으로는 농지 소유 상한 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인 1천㎡ 이상의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이 아닌 개인에 대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38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연천군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농지 불법전용 대상지 사후조치 부적정
소 관 기 관 연천군 (가과)
조 치 기 관 연천군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연천군 가과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불법전용 행위를 단속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농지법」 제4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지법」 제58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에서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농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으로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에서는 [표]와 같이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불법전용 농지 52건에 대하여 고발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을 하지 않는 등 농지불법 전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소홀히 사실이 있다.

[표] 농지 불법전용 대상지 사후관리 부적정 현황 : “생략”

그 결과 농지로 이용되어야 할 13필지가 타 용도로 불법 전용되어 방치되는 등 농지 불법전용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위 사실을 확인하며 앞으로는 농지법의 철저한 적용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한편 지속적인 원상회복 명령과 관리로 농지의 건전성 회복과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농지 내 불법 형질변경 등 위법 사항에 대하여 「농지법」 등에 따라 조치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 내 불법 사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에서는 도로, 하천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고, 해당 준공된 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목변경, 합병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적장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사 등 17개 사업(757필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는데도 지적정리(지목변경, 합병 등)를 하지 않는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토지의 실제 용도와 지적공부상 용도가 다르게 관리되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준공된 토지의 지목변경 등 미이행 현황 : “생략”

4. 관계기관 의견

위 사실을 확인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연천군수는

-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된 17개 사업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변경, 합병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된 토지의 사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